

“金사과 탓에 수입, 검역상 불가능”

농식품부, 과실류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 기지설 명화... 병해충에 딸기·포도 수출 중단될 수도

폭풍한 사과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사과 수입을 통해 수급을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현재의 검역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과일값이 41.2% 올라 지난 1991년 9월(43.9%) 이후 32년 5개월 만에 가장 컸다. 사과(71.0%), 꿀(78.1%) 등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사진은 최근 어느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이 사과를 살펴보고 있는 모습이다.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국제 협약에 따라 시행되고, 일부 절차를 생략했다가 외래 병해충이 유입되면 생산성 저하는 물론 다른 작물의 수출 중단까지 불러오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래 병해충으로부터 농업 생산 기반을 안전하게 유지하고, 식량안보와 국민 건강 보호 등을 위해 '식물방역법'에 따라 과실류 등에 대해서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반드시 거처도록 하고 있다.

생과일과 열매채소 등은 원칙적으로 수입을 금지하며,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세계무역기구(WTO) 동식물위생·검역 조차(SPS) 협정 등에 근거

한 과학적 증거에 따라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병해충에 대한 안정성이 확보된 후 수입이 가능하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검역 전문가들이 수입금지 품목에 대한 병해충 위험을 평가하고, 위험도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총 8단계로 운영된다.

단계별로는 1단계 수출국 요청 접수, 2단계 수입위험분석 절차 착수(이상 착수단계), 3단계 예비위험평가, 4단계 개별 병해충 위험평가(이상 위험평가) 5단계 위험관리방안 작성, 6단계 수입 허용기준 초안 작성(이상 위험관리 단계), 7단계 수입허용기준 입안예고, 8단계 수입허용기준 고시 및 발표(최종 행정절차) 등이다.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공통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185개국 가입한 IPPC에 근거해 WTO SPS 협정 등 관련 국제 규범에 부합해 운영되고 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 과실류 수입을 요청해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완료돼 수입이 허용된 나라는 31개국 총 76건이다. 51개국 255건은 수입위험분석 절차가 진행 중이다.

사과는 아직 외국산 수입이 허용되지 않고 있다. 1989년 호주를 시작으로 총 11개국이 신청했지만 호주를 비

롯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 중국, 이탈리아, 포르투갈, 아르헨티나 등은 아직 1단계에 머물러 있다. 미국 2단계, 독일과 뉴질랜드는 3단계에 있고 가장 진전을 보이고 있는 일본은 1992년 요청에 따라 검역 절차가 시작됐지만 5단계가 진행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수입위험분석 절차는 품목 특성, 수입국과 수출국의 병해충 분포 상황, 상대국 반응 속도 등 다양한 변수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소요기간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기존 수입이 허용된 76건의 사례는 평균 8.1년이 소요됐고, 가장 단기간에 완료된 사례는 중국산 체리로 3.7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우리 농산물이 외국에 수출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국의 위험분석 절차를 거친 경우의 평균 7.8년이 걸렸다. 우리나라 갈굴은 1999년 12월 뉴질랜드에 수출을 요청했지만 허용되기까지 23년이 걸렸다. /뉴시스

‘제1회 NPS 포럼’ 연다

국민연금공단, 연금 개혁 논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은 연금 개혁의 공론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 상생·협력의 사회적 책임을 위해 계획한 ‘제1회 NPS 포럼’을 오는 6월 말~7월 초에 열 계획이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모두가 누리는 상생의 연금’ 구현을 위해 국내외 전문가 단체와 학술적 의견 교류, 정책적 논의 및 MZ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공론화 분위기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국제기구 및 분야별 전문학회와의 교류를 통한 연금개혁 지원, 국민연금 기금 국내외 쟁점 등 정책 과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고 자리로 꾸며진다.

또 미래 가입자인 대학원(생)들의 참여를 통해 젊은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소통의 장도 마련될 예정이다.

아울러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지역 발전 행사를 전북자치도와 별도 협의·운영하며, 7대 사회보험 협의체 공동 연구 세미나를 통한 전문가 협업 활성화 및

지역 상생 발전 방안 공유 등을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 방안도 모색한다.

공단은 학회·세미나 등 개별적으로 열리던 행사를 공단에서 통합·재구성함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예산 효율화 등의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공단은 특별행사와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 오는 20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한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연금공단 연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권문일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청년, 노인 세대, 미래세대의 노후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이뤄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면서 “이번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의 학술적 의견 공유 및 MZ세대와의 소통의 장 마련 등 연금 개혁의 공감대 형성과 긍정적인 인식이 확산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뉴시스

“지속적인 사고 예방 위해 안전장비 활용할 것”

전기안전공사, IoT장비 60곳 사업소 보급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안전 최우선’의 안심 경영 실천을 위해 Io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11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로 보급하는 스마트 안전장비는 △특고압 충전부 접근 경보 △작업자 간 효율적 통신 △지중 조명을 통한 시야 확보 등 4가지 기술을 통합한 스마트안전모 등이다.

또 감지 센서를 활용한 출입자 경보를 비롯해 관리자에게 작업정보 공유 등 IoT 음성경보 장치를 연계한 안전 사고 예방 장비도 보급한다.

그동안 공사는 중소기업과 협업해 개발을 추진하고, 여러 차례의 현장 실증을 거쳐 최종 개발했으며, 관련 기술 3개를 특허 출원했다. 향후 기술 나눔 등을 통해 스마트 안전기술 확산에도 노력할 예정이다.

김용영 안전관리처장은 “공사가 개발한 스마트 안전장비는 최종 시범운영을 거쳐 전국 60개 사업소에 보급할 예정”이라며 “지속적인 사고 예방을 위해 스마트 안전장비 개발과 활용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

농진청 ‘기상재해 예측 정보’ 75개 시군 제공, 내년 전국으로

농촌진흥청은 전국 75개 시군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장 단위 기상재해 예측 정보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농장별(30×30m) 지형에 따른 기상 특성과 재배 작물의 생육 특성을 고려해 기상재해 발생 위험을 예측하고 피해를 줄이는 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기상이나 재해 정보는 최대 9일까지, 그 외 정보는 3일까지 농장주에게 알려주고 있다.

농진청은 알람 서비스 핵심기술을 2017년 개발하고 전북특별자치도 전

체 시군(14개)을 대상으로 실증연구 후 서비스 제공 지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올해 말에는 110개 시군으로 확대한 후 내년까지 전국 155개 시군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보를 받고 싶은 농업인은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 누리집(agsmet.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필지 주소, 재배 작목 등을 적어 우편 및 팩스, 전자우편(kjw130@korea.kr)으로 거주지 시군 농기센터 기술보급과·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에 제출하면 된다.

신청 농업인은 예측 정보를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알람 문자 등 휴대

전화로 받을 수 있다.

농진청이 1년 이상 알람서비스를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85%가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라고 답했다. 특히 ‘작물 재해예방에 도움이 됐다’라고 응답한 농가는 85.7%로 나타나 서비스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됐다.

정구복 농진청 기후변화평가과장은 “최근 증가하는 봄철 이상기상으로 발생하는 과수 작물의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 데 알람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뉴시스

융복합 신제품 신속출시·안전확보 나선다... 올해 27.9억 지원

복합형 콘센트,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 등 새로운 융복합 제품을 안전하게 시장에 출시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개발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본격 개시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올해 ‘융복합·신기술 제품안전 기술 지원 사업’이 19개 과제(27억9000만원 규모)에 대해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국표원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

(전기·생활용품·어린이제품)의 위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205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USB타입과 220V 플러그를 동시에 사용가능한 복합형 콘센트 제품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시험방법 가이드를 개발한다. 또한 이동식 전기차 충전기에 적용되는 안전 잠금 기능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세부적인 시험방법 가이드가 개발된

다.

아울러 전기메트의 안전관리 기준 및 검증 기법 개발을 통해 전기메트 제조기업은 장시간 테스트 에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에 맞춰 출시되는 융복합 신제품들에 대한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및 기반 조성 등 연구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략기업투자협의회 개최

산업부, 올해 예타 신청대상 선정... 19개 중 10개 심의

산업통상자원부가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할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전략기획투자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수요가 제기된 19개 사업 중 올해 신청 가능한 총 연간 사업규모 5000억원 내외에 맞게 10개 사업을 신청하는 안을 심의했다.

전략기획투자협의회는 민간이 단독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기술 중심 연구개발(R&D) 투자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민관협의체다. 1차 회의에 앞서 13명의 민간위원이 신규로 위촉된다.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분야별 전문가와 경제 및 기술금융 등 정책전문가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급변하는 제품 시장환경에 맞춰 출시되는 융복합 신제품들에 대한 국민 생활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마련 및 기반 조성 등 연구개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상정된 안건에는 알카미스트II와 한국형 수소 환원제철 실증 차세대 첨단반도체 기술센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등이 포함됐지만, 협의회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초격차 프로젝트 추진계획과 내년 산업에너지 R&D투자 방향 등도 논의됐다. 4대 초격차 프로젝트 로드맵은 오는 5월 완성될 목표다.

10월까지 신규 프로젝트도 추가 발굴해 확정할 계획이다. 이에 맞춰 전략기획투자협의회도 오는 5월과 10월에 추가 열릴 예정이다.

강경성 산업부 1차관은 “기업과 연구자들이 혁신에 도전할 수 있도록 민간주도로 투자방향을 정하고 정부가 실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PDF 지면보기 서비스
www.jjmaeil.com에서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